

데스크시각

‘못 말리는 예산 폭탄’



홍행기
정치부장·편집부국장

“요즘 호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청와대의 한 인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평소 생각해 두었던 문제였기에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 “이쪽 민심 말인가요? 좋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지 “두고 보십시오. 호남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이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인사는 기대 이상 만족

혼자만의 생각일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호남 중용’은 기대 이상이다. 당장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영록 농

림수산식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최고위직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는 것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도 호남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승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들이다. 신정훈 농어촌 비서관, 유승화 제2부속실 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 비서관도 청와대에서 현안 실무를 책임지는 호남 인사들이다. 정부 조직인 18부4처7청을 기준 삼아 총리와 장·차관, 차·청장·위원장 등 차관급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고위직을 맡고 있는 70명의 인사 중 광주·전남 출신이 15.7%인 11명이나 된다. 14.3%를 차지하는 전북 출신 10명까지 합하면 호남 출신이 30%인 21명에 이르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중반인 지난 2015년 3월께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 중 호남 출신 인사는 겨우 15.9%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뿔발이 변해 바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없었던 인재가 별안간 생겨난 것도 아닐 테니, 호남 인재 중용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우

대 또는 호남 배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선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폭탄을 터뜨렸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부처 또는 청와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자랑삼아 내세우는 지역 인사들도 부쩍 늘었다. 내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뜻을 둔 광주 시장·군수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와 얼마나 가까우냐’를 두고 경쟁이 붙을 정도다. 국민의당이 ‘죽을 썩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현 정부나 대통령 측근과 가까울수록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2% 부족한 것은

모처럼의 인사 폭탄이 싫은 것도 아니요 또 굳이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들떠 있다 보니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수백억, 수천억 예산을 움직이는 자리’에선 호남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구,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북 출신이다. 기업

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장이 경남 출신이고, 금융위원장은 강원이 고향이다. 물론 이들 장관이나 수장이 자신의 고향에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장기간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호남으로선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새 정부가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줄인다고 공언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국비 확보와 관련 시장·군수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와 얼마나 가까우냐’를 두고 경쟁이 붙을 정도다. 국민의당이 ‘죽을 썩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현 정부나 대통령 측근과 가까울수록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딱딱한 삶을 살아온 호남 사람들의 가슴이 푸근해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소외된 한이 민주성치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번엔 ‘못 말리는 예산 폭탄’을 기대한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5·18 때 광주 폭격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

1980년 5월18일 이후 광주를 향한 공군의 출격 대비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어느 전투기 조종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당시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아놀드 피터슨도 1994년 펴낸 책 ‘5·18 광주사태’에서 “미군 하사로부터 ‘한 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당시 조종사의 직접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TBC는 1980년 수월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근무했던 F-5E/F 전투기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사건을 뒤인 5월 21일인가 22일인가,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투기 조종사 김 모 씨는 당시 “전투기에서 땅으로 쏟아붓는 500파운드짜리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광주 출동용)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10년 넘게 전투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공대지

실무장을 최대한 장착하고 대기했기 때문에, 그날을 도트하게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지 폭탄은 전투기가 비행하며 다른 전투기를 요격하는 공대공과 달리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폭탄을 말한다. 김 씨와 같은 대대에 근무했던 또 다른 조종사 김 모 씨도 광주 공격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대장이던 김홍래 전 공군 참모총장은 두 조종사를 데리고 있었고 출격 대기를 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 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증언한 조종사들은 북한에 대비했다면 공대지가 아닌 공대공 무장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하루도 못 돼 철회되기는 했지만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이 이뤄졌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제 당시 군 지휘체계에 대한 기록과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함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교통 시설 예산 수도권·영남 편중 바로잡아야

박근혜 정부 4년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후 지역인 호남에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1.8% 수준에 그치는 등 극심한 지역 간 편차를 보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2013~2016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보조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수도권에 1조2650억 원(48.3%), 영남권에는 1조1492억 원(43.9%)이 집행됐다. 호남권은 481억 원에 불과했다. 4년간 집행된 전체 예산 중 92.1%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투입된 것이다. 특히 영남은 수도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통 시설 예산마저도 영호남 차별이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보조받은 예산을 비교해도 차이가 극심하다. 대구가 4년간 4699억 원을 보조받아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확충하는 동안 광주시는 259억 원에 만족해야 했다. 국토 균형발전이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려 불균형을 부추겨 온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교통 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주로 국가 지원 지방도 확장 및 포장 공사, 위험 도로와 혼잡 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새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교통 시설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호남은 그나마 만회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정부는 지역 낙후도 지수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조정해서라도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닭의 자유를 지키는 ‘천부계권’의 생명운동



류동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위원

같은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축사를 짓고, A4용지 3분의 2 크기 사이즈 닭장에 출몰이 층층이 기르다 보니, 진드기가 생겨도 날개짓해서 털지도 못하고 고통 받는 닭들이 산란율이 떨어지자 농가들이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AI파동 원인도 바로 이 밀집 사육이었다.

그 뉴스를 보며 필자는 닭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한번 상상해 보라. 닭으로 태어났더라면 그 좁은 닭장에서 진드기한테 뜯겨서 가렵고 서러운데, 드닷없이 맹독성 살충제를 뿌려서 알까지 농약에 중독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닭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잘 난 생명체인가에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 닭들을 가두고, 닭에게 귀한 계란을 그런방식으로 뺏아가는가?

어렸을 적 마당에서 뛰놀던 닭들이 서로 닭 벼슬을 물며 파닥거리며 싸우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여 교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닭은 그렇게 정열하는 사랑을 하는 동물이다. 닭의 품속에서 따뜻한 달걀을 깨내 올 때면, 그래도 닭의 자식인데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었다.

그런데, 사육장 속에 가둬는 닭한테서 달걀을 대량으로 착취 할 때 인간은 미안함과 닭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까?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 원리가 되었다. 그런데, 닭에게는 왜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일까?

자유롭게 뛰어 놀며 흙을 파서 흙 목욕을 하는 닭들은 진드기도 안 생기고 항생제도 필요 없다고 한다. 달걀을 싸게 먹고 자 하고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밀집 사육방법을 발전시켰고, 자연은 AI파동과 살충제 달걀로 우리에게 보복을 하였다. 닭의 행복을 고민하면서 키우는 동물 복지농장은 키우는 농민을 행복하게 하고, 소비자를 건강하게 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우리는 먹거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오는 혁명을 해야 한다. ‘천부인권’ 사상으로 인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프랑수아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있었듯이 ‘천부계권’(天賦雞權)의 사상으로 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자유혁명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생명

을 지켜주는 생명운동이다. 자유롭게 키우는 닭 농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대량 사육하는 시설 현대화 시설에는 지원을 멈추고 동물 복지 농장에 지원을 해야 한다.

동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닭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에 적용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 농민에게 존경을 보내고, 귀한 달걀을 낳아준 닭들에 대한 고마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돌이 결혼해 결국 1.17명밖에 낳지 않고 죽어가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종족 유지도 하지 못하는 열등동물에 불과하다. 함부로 먹을거리라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고, 육망을 채우려 할 때 그 육망은 부대림이 되어 반드시 인간에게 보복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은 천재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부른 인재 참사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면 재난이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 고

지역과 대학 그리고 축제



류재한
전남대 교수·아시아문화학회장

되었고, 그 결과는 대학축제의 직접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필요’(1위)와 ‘대학만의 문화적 정체성 반영’(2위), ‘대학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축제’(3위)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필요’라는 항목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학 축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치러지고 있음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대학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만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과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축제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은 2순위를 차지한 ‘대학만의 문화적 정체성 반영’이라는 항목과 연동돼 있다. 3위를 차지한 ‘대학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축제’는 대학 캠퍼스에 국한되는 축제의 공간적 범위의 문제와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축제의 확장성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 대학축제가 갖고 있는 한계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 포르투갈 코임

브라(Coimbra) 시에 위치한 코임브라대학 축제의 얘기이다. ‘케이마 다스 휘타스’(Queima das Fitas)로 불린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리본 태우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 축제가 대학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의 대표 축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졸업식이 바로 대학축제라는 사실이다. ‘리본 태우기’는 모든 것을 마치고서 리본은 학사과정 중 책 파일을 묶는데 사용했던 리본을 가리킨다.

졸업예정자들은 재학 기간 내내 간직해 온 소속 대학을 상징하는 색깔의 리본을 큰 솔 안에 넣고 태운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해당 졸업예정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힌 리본은기도 사 축원처럼 태워지게 되는 것이다. ‘케이마 다스 휘타스’ 축제의 또 하나의 핵심 프로그램은 ‘코임브라 파두(fado) 부르기’이다. 코임브라 대학축제가 포르투갈의 전통음악인 파두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코임브라 대학축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대표 프로그램과 잘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세기에 걸쳐 계승되어 온 음악으로, 연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이자 사랑을 찬미하는 세레나데인 코임브라 파두가 불리던 곳은 다른 어느 코임브라 대학

이기 때문이다. 5세기 이상 파두가 발전해 온 코임브라 시가 대학도시이자 문화도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처럼 대학의 고유성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토대가 되고 있는 코임브라 대학 축제는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축제가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축제 공간도 대학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와 시 도처에서 진행되는 점도 시의 대표 축제임을 확인해준다. 실제로 학생들의 거리 공연과 퍼포먼스 외에도 미술 전시회와 영화, 연극제, 투우, 스포츠 행사와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축제 프로그램들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처럼 코임브라 대학축제는 시의 대표축제로서 대학과 시의 문화적 정체성의 산물인 코임브라 파두의 대중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아메니티(Amenity)를 높이고 있다. 대학 축제만으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코임브라 시로 유인하며 대학과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은 우리 대학과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축제가 상업적인 대중문화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동시에 대학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적인 대중문화로 견인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지난해 겨울이었다. 고등학교 딸이 뉴스 영상을 보더니 기겁을 했다. AI(조류독감) 감염 닭을 도살 처분하는 장면이었다.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는 닭을 마대(麻袋)에 가득 담아 생매장하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던지 눈물까지 터트리지는 것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AI 여파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2600여 만 마리에 이른다. 이중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닭이었다. 해마다 있어 온 일이었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동물 복지

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정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92곳에 불과하고, 국내 산란계 농가 1464곳 중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다른 품목의 인증 농장 수를 합쳐도 132곳이다. 초기 투자 비용도 문제지만 정을 보는 광경이었기

했다.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젓소·오리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물의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나도록 정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92곳에 불과하고, 국내 산란계 농가 1464곳 중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다른 품목의 인증 농장 수를 합쳐도 132곳이다. 초기 투자 비용도 문제지만 정을 보는 광경이었기

부 지원이 없고, 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농가 및 소비자의 책임과 비용 지拂은 당연하다. 동물 복지형 사육,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생산성에 매몰돼 간과했던 공장식 사육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닭들이 행복을 치고 ‘흙 목욕’을 할 수 있는 농장이 많아져 소비자들도 좋은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때를 기대해 본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